동서 교류 속도 붙고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탄력

■ 경전선 전철화 예비타당성 통과 지역민 기대 고조

전남도·정치권 노력 통과 이끌어
호남소외 상징 90년만에 풀려
광주·전남 관광 활성화도 도움

호남지역민의 숙원사업이던 '호남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19일, 화순 능주 영벽정 앞 철로를 광주~순천간 열차가 달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광주·전남 정치권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 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와 관련, 수십년 째 불편을 겪고 있는 영·호남 지역민들의 교통 복지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반영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승용차로 고작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광주 송정~순천 구간을 2시간 넘게 가는가 하면, KTX 전면 개통으로 광주와 서울이 불과 1시간 30분 거리로 단축됐음에도 경전선을 이용해 부산에 닿으려면 6시간 넘게 걸리는 고통을 겪어온 영·호남 지역민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의 예타 통과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동서 교류 활성화 및 관광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호남차별의 상징', 90년 만에야=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호남·경전선 철도는 호남 차별 상징이었다.

호남선은 36년(2003년)만에야 목포~임성(7.3㎞) 간 복선화를 끝으로 복선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목포까지 굼벵이가 기어왔어도 더 빨리 왔을 세월'이라는 자조섞인 표현까지 나왔다.

경전선도 마찬가지다. 선로가 낡고 굴곡도 심해 '저속철'의 오명을 쓴 지 오래다. 목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388㎞가는데 42곳이나 정차하면서 무려 6시간 33분이나 걸리는 '지옥철'이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첫 글자를 딴 경전선은 정부의 4대 간선철도망(경부·호남·중앙·경전선)임에도, 경제성에 발목 잡혀 전철화 사업 추진이 미뤄졌었다.

특히 광주~순천(117㎞) 구간의 경우 일제 강점기인 1930년 건설된 이후 한 번도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시속 50~60㎞로 달리는 '느림보 기차'다. 그런데도 수십년 째 달라지지 않았다. 또 다른 '눈물의 호남선'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그렇다. 지난해만 해도 0.85라는 B/C를 얻고도 AHP가 0.489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치(0.5)에 0.01이 부족, 문턱을 넘지 못했다.

B/C가 이 구간보다 낮은 철도 건설 사업도 AHP를 통과해 건설되거나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지역 차별이라는 말이 나왔다. 당장, 춘천~속초 철도 건설(2016년·B/C 0.79),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 건설(2010년·B/C 0.80), 포항 영일신항 인입철도(2009년·0.76), 소사~대곡 복선전철 건설(2005년·0.80) 등도 경전선에 비해 경제성 평가가 못 미치지만 AHP를 통과했다.

전남도, 지역정치권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부터 호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전선 전철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경전선 영향권 4개 시·도지사와 16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도 냈다.

김영록 지사는 올 4월 27일 이용재 도의회 의장, 전남도립대 학생 등 170여 명과 직접 목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6시간 33분 걸리는 무궁화호 느림보 열차를 타고 가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김 지사 등과 함께 부산에서 경전선 전철화 촉구를 공동으로 결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경전선 전철화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예타 통과를 계기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민들의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2023년이면 목포~부산을 2시간 24분에 OK =전남도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부산 부전역까지 현재 6시간 33분 걸리던 데서 2시간 24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시간 9분 단축되는 셈이다. 또 광주 송정역에서는 부산까지는 기존 5시간 42분 걸리던 시간이 2시간 36분이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안팎에서는 목포~부산, 광주~부산이 전철로 연결되면 영·호남 교류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장, 전남의 경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의 섬, 해안, 삼림 등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자원에도, 기반시설이 미흡해 민간투자나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전철화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교류 물꼬가 터짐으로써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지역 문화자원으로 영남지역 관광객을 끌어모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오는 2025년까지 1조7700억원을 들여 경전선(광주역~순천) 122.2㎞를 개량하고 전철화하면서 보성~순천(48.4㎞) 구간을 우선 착공해 2023년 남해안 철도 목포~보성 구간과 동시에 개통하는 방안을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 대통령 23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한반도 정세 논의

2박 3일 일정 중국 방문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
24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중을 계기로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제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며, 청두 방문 직전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과 회담을 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및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6개월 만이다. 특히 한중 정상은 회담을 통해 최근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을 앞두고 최근에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통한 '우회설득'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설득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대해 "정상의 급에 맞는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미리 의제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양 정상이 협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 이후 같은 날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이다. 한 부대변인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실질협력 제고 방안과 한일중 3국협력 틀 내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4일에는 중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한일정상회담을 한다.이 자리에선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첫 업무보고 받은 정세균 "규제개혁, 왜 국민이 체감 못하느냐"

경제분야 '국민체감' 강조
"국민 보은 위해 총리직 수락"

"정부가 이런 규제 혁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죠?"

19일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각 실의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정 후보자는 특히 경제 분야 관련 보고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자기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정 후보자는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주요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죠?"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차 산업은 '게임 체임저'(판도를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중국의 경우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앞서는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 분야에서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중국에 로열티를 내든지, 종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규제 혁신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공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경제 주체들의 시각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고, 18일 출근길에는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 부처 간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총리실 주요 간부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규제 개혁'과 '4차 산업'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정 후보자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뒤 행정부 2인자인 총리직에 오게 된 것을 두고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는 점을 의식한 듯 "고심 끝에 총리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총리실 관계자들에게 재차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와 국민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국내외 난제가 있고 내가 소용이 될 수 있다면 이런저런 격식을 넘어서 받아들이고 나서는 게 보은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업무보고를 받으며 자기 생각을 부드럽게 말하는 가운데 '공무원의 긴장감'을 요구하는 날카로운 발언들도 적지 않게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센터

친환경양식 기술이전교육 |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 친환경 양식업체 모니터링 지원 | 양식장 심화교육 | 기술교류 워크숍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17~2019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 사업' 을 통해 53명(20%)이 양식장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 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